테마칼럼

교육과 미래

시험에 빠진 교육

이지헌

"시험에 빠진 교육, 그런 교육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동기는 대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다.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시험은 대개 사(오)지선다형의 객관식이다. 아이들은 주어진 질문을 읽고 그에 맞는 답을 정해진 시간 내에 신속하게 골라내야 한다. 0교시부터 밤 늦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몰두하는 일이 바로 이런 시험연습이다. 우리 아이들은 시험준비가 곧 공부인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시험 점수는 비교평가 되어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남이 더 잘했을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서로 비교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온통 관심을 쏟을 뿐, 그것이 왜 맞고 틀린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또한 교사와 학생은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운다. 출제 범위를 벗어나서 공부하는 일은 손해를 자초하기도 한다. 객관식 시험의 정답을 찍어내는 데 골몰하는 공부로 인해 아이들은 '시험 기계'가 된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쉽게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비교평가의 경쟁으로 뜨거워진 교육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이며 이는 우리들을 통제하는 최고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 시험이 지배하는 교육, 시험으로 아이들이 통제받는 사회, 시험으로 백성을 관리하는 그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최근 교육학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험에, 그것도 사지선다형이라는 객관적 시험에 그토록 완벽하게 사로잡히게 되었는가를 연구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미 군정기에 시험방법을 객관적 시험으로 개조하였고, 한국전쟁기에 중학교 입학시험을 객관식의 국가시험으로 실시하였으며, 5·16 군사정부 시기에 학사 자격고시와 중·고·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선다형의 객관식 형태로 국가가 실시했다고 한다. 국가가 중요한 시험들을 장악하고 이를 주로 객관식 선다형 시험으로 치르게 강제하면서 객관식 시험이 확대되었고, 객관식 시험에 대한 맹신이 생겨난 것이다.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국가는 시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부정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시험을 관리하는 정책을 강행하였다. 둘째, 객관식 시험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방책이 고수되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은 늘 문제점의 근원으로 간주되었고 이와 달리 국가는 이 문제점의 해결사로 등장하면서 공정 경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객관식 시험으로 교육계를 지배했다.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현장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객체로 전락하고, 또 도구에 불과한 객관식 시험이 교육 현장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시험에 빠진 우리 교육의 짧은 역사는 그렇게 전개돼 왔다.

시험에 빠진 교육, 그런 교육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이들과 우리 자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쉬운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먼저 이런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현재 어떻게 견디고 있으며 어떤 삶을 약속받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백성이라야 주체적인 교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육이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마다 이를 바로 잡아주기를 권력의 중심부에 기대하고 의존하였다. 이런 잘못된 습성은 잘못된 역사가 낳은 것이다. 중심을 잃은 교육은 교육의 주체가 전도된 역사의 산물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우리 교육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반성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늘 뼈아픈 역사의 산물임을 깨닫고, 시험에 빠진 교육의 역사를 다시금 성찰해보자.

〈전남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김순호

갑상선에 혹이 있다구요?

한 중년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진료실을 들어선다. 얼굴이 부스스한 것이 어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의자에 앉은 후에도 마음을 가다듬느라 말을 잇지 못한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떨리는 음성으로 탄식하듯이 말을 꺼낸다.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하네요."

눈에 물기가 번지는 것이 마치 시한부 인생을 주제로 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리고 요즘 건강검진이 활성화되고 초음파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와 같은 장면은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박리다매(薄利多賣)'식의 생존을 요구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이분과 대화할 시간을 불과 1~2분밖에 주지 않는다. 미국에 가서 보았던 놀라운 광경들, 즉 의사가 한 환자와 30분 이상 상담을 하면서 질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부러울 뿐이다. 만약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나는 환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혹은 중년여성의 절반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합니다. 그 혹은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특별하고 고약한 병을 가진 것은 아니랍니다." 환자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말을 이어갈 것이다.

"갑상선에 생긴 혹의 90% 이상은 좋은 혹입니다.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르는데, 좋은 갑상선 결절은 평생 가지고 살더라도 건강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치료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의해야할 점도 없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환자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한다는 것도 잘 안다.

"참! 혹시 좋지 않은 혹으로 판명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시죠? 다행스럽게도 갑상선암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암보다도 경과가 좋은 암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갑상선암 환자에게 나쁜 암도 많은데 이렇게 좋은 암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리곤 한답니다.

그리고도 많은 이야기가 남았을 것이다. 먼저 갑상선 결절이 생긴 것은 환자가 무엇을 잘못한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 불필요한 죄책감을 없애주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다음 좋은 갑상선 결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다른 사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병원은 얼마 간격으로 와야 하는지, 그리고 갑상선 세포검사가 정말 소문대로 그렇게 안전하고 정확한지 등을 설명해주다 보면 30분은 훌쩍 지나갈 것이다.

문득 정신이 들어 나는 미국처럼 하루에 환자 10명을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고, 반나절에 50명씩은 진료해야 병원이 유지가 되는 한국형 의료제도하의 의료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주머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를 해보면 대개는 좋은 쪽으로 나온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구요 검사를 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죠." 눈치 빠른 환자도 쌓여있는 차트를 보고 자리를 얼른 피해준다. 그리고 다시 어두운 기색의 아주머니 한 분이 진료실로 들어오고, 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광주기독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기고

박윤식

이제 지자체도 변해야 할 때

지난해 대선에 이어 민의의 대변자를 뽑는 18대 총선이 지난 4월9일 치러져 새로운 인물을 가려 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제자리를 찾게 된 셈이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비자금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이 물러나면서 삼성가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학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가 탄생, 대한민국 우주 산업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줬다.

이렇듯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변화 물결 속에 공직사회도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2월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중앙부처의 지자체 이관,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력 감축과 업무 조정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중앙이 변하면 자연히 지자체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면서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자체 스스로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담긴 '섬기는 정부', '경제 살리기' 등의 용어가 각종 회의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와 더불어 관가에서는 '얼리버드(earily bird) 신드롬'이라 하여 공무원들이 아침형 인간으로 변화 중이다. 또 공무원 '머슴론'으로 의식개혁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서 공직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안팎에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이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라고 마냥 앉아서 있어서야 되겠는가?

행정서비스의 최고 덕목인 도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있어서도 '만족과 감동'에서 이제는 '파트너(customer oriented)'로 도민을 섬기기 위한 전남도정에 새로운 변화와 바람이 일고 있다.

전남의 비전과 살 길은 지자체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자체가 변해야 한다.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관행처럼 행해졌던 불합리한 제도는 바꾸고, 창의적 발상은 시책화해야 한다.

전남도정 곳곳에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변화와 새 바람을 수용,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10대 이행 과제'를 확정,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소비자인 도민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밀착 생활 행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열심히 뛰는 만큼 주인인 도민은 더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공무원 수준과 정부 서비스와 국가경쟁력은 서로 비례한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세계 경쟁력 2007에서 정부 효율성 1위, 국가 경쟁력 2위를 차지했다. 우리 모두 반추해 볼 대목이다.

〈전남도 행정혁신과장〉

사설

'고질병' 사학 비리 근절 대책 서둘러라

사학재단의 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사장이 총·학장을 겸임하면서 교비를 유용하고, 교수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가 하면 국비 지원금까지 빼돌리는 등 일부 사학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식이 실종되고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것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3일 순천 M 대학 총장과 총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 30명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배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친인척 관계인 총장과 총무처장이 교수와 교직원 임용 대가로 1인당 8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씩 모두 14억5천만원을 챙기고 회계서류를 조작해 공금 7억여원도 착복한 혐의다. 특히 일부 교수들까지 편·입학생을 모집하면서 산학협력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재직 증명서를 꾸며 11억원을 횡령했다. 대학인지 사기집단인지 헷갈릴 정도다.

지난 21일에는 교비와 국비 지원금 50여억원을 횡령한 강진 S대 학장이 구속됐고, 10일에는 목포 D대학 전·현직 총장이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법정구속 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사학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은 걸 보면 사학재단의 일탈행위는 근절될 수 없는 '고질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사학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만큼 사학재단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말도 된다. 당국의 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의 자율성은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 하지만, 학교법인에서 자주성 못지않게 요구되는 가치는 공공성과 투명성이다.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우리 사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성은 더욱 외면할 수 없다.

건전한 사학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라도 학사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비리 사학재단은 엄중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강부자' 내각에 청와대도 '강부자'인가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을 공개하면서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 청와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내각에 이어 청와대 장·차관급 수석비서관들의 재산 규모가 입방아에 오른 것이다. 일부 수석은 '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실장을 비롯 청와대 수석비서관 10명의 평균 재산은 35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토지 5억2천여만원, 건물 20억8천여만원, 예금 8억8천여만원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면 64억5천여만원으로 늘어난다.

신고액 기준으로 보면 공개된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다. 또 대부분은 집값 급등 지역인 '버블 세븐' 지역(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평촌·용인)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골프·헬스회원권 등도 주요한 재테크 수단이었다. 서민의 입장에선 '강부자 청와대'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석들은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와대의 말처럼 이를 빌미로 사회적 증오를 증폭시키거나 부적절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소모적 행태일 뿐이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부자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잘못된 풍토를 없애야 한다.

하지만 재산 형성과정에 불법 행위나 부동산투기 의혹 등 도덕적 흠결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청와대는 투기나 불법행위가 아직 드러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서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재산 축적과정을 철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부자 수석'들이 서민 등 소외계층과 지방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구상하고 펴나갈 지도 의문이다. 새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약자나 '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득권층과 수도권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면 서민과 지방은 설 땅을 잃을 수밖에 없다.

無等鼓

스포츠 재벌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황색 별'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조만간 1천억 대 재산가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박지성은 지난 2000년 일본 J-리그에서 첫 프로무대를 밟은 후 채 10년도 안 돼 명예와 함께 거대한 부의 탑을 쌓게 된 것이다. 그는 최근 경기도 용인에 250억 원 대에 이르는 7층 빌딩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프로 스포츠계에서 부자들은 한 둘이 아니다. '오른발의 마술사' 데이비드 베컴(33·LA 갤럭시)은 걸어다니는 기업이다. 2006년 말 현재 그의 재산은 1억 1천200만 파운드(한화 2천120억 원)로 추산돼 현역 프로 축구선수 가운데 최고이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해외 프로스포츠 진출의 기수인 LA 다저스의 박찬호도 연봉 수입에다 다양한 재테크까지 겸비해 재산이 1천억 대가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스포츠 재벌들은 돈만 벌어들이는 게 아니다. 포뮬러 원(F1)에서 7차례 챔피언에 등극한 '황제' 미하엘 슈마허는 매년 만지는 1억 달러 가까운 돈 가운데 일부를 소중한 곳에 써왔다. 슈마허는 쓰나미피해 복구금으로 1천만 달러(100억 원)를 내놓았는가 하면 해마다 일정액을 자선 기금으로 내고 사후 장기기증 약속까지 했다.

1천억 대를 바라보는 박지성은 수익금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골프선수 최경주는 지난해 100억 원으로 '최경주재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이천 냉동창고 화재 피해가족에게 3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24일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 평균액이 22억 8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는 100억 원대를 훌쩍 넘었다.

이 가운데 '권력'이나 '직분'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이가 있다면, 몸 하나를 밑천으로 재벌의 반열에 오른 후 아름다운 기부까지 하는 스포츠 스타들에 견주어 낯 부끄러운 일이다.

/박치경 체육·여론매체부장 unipark@

네티즌 한·중·일 교류사이트서 건전한 토론을

한국과 일본 누리꾼의 교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네이버 인조이재팬'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실시간 자동번역 기능을 갖춘 이 게시판은 양국간에 정보도 공유하고 미래발전적 한일관계를 재정립 하자는 젊은이들의 대화의 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곳에 들어가보면 한일 양국뿐 아니라 중국 네티즌들까지 가세해 서로간에 헐뜯으며 설전을 벌이는 게시물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이어진다. 이른바 상대방 국가를 비하하거나 자국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넷셔널리즘(net과 nationalism의 합성어)인 것이다.

쪽바리, 짱꼴라, 티벳학살, 가오리방쯔 등 상대방을 자극하는 단어들이 즐비하다. "○○에서 폭동이 일어나 다 같이 죽어라" 같은 막말도 보인다. 또 반일·반중·혐한을 주제로 한 인터넷 사이트도 운영중이다고 한다.

이렇듯 3국간의 상처만 건드리며 폐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감정만 교환한다면 미래의 주역인 젊은 세대로써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더 넓고 큰 방향에서 우리 네티즌들이 건전하게 유도하며 솔선수범할 수는 없을까.

▲유환권·광주시 북구 오룡동

애꾸눈 전조등 차량 사고 위험 높다

어두운 밤길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필수적인 장비는 바로 전조등이다. 그런데 야간 운전중 두 개의 전조등 중 하나가 꺼진 채로 달리는 차들을 적잖게 본다.

운전자들은 겉으로야 운전하는데 당장 큰 불편이 없는 듯 하니까 그냥 방치한 채 밤길을 달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그 전조등 하나가 없는 이유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조등을 하나 켰을 때와 두 개 모두 켰을 때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거리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실험해 본 결과는 실로 놀랍고 충격적이다.

먼저 전조등을 두 개 모두 켰을 때, 운전자가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밝기인 5 룩스 불빛의 범위가 75m 앞까지 길게 뻗어 나간다. 그러나 하나만 켤 경우는 55m에 불과해진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제동 거리는 60m라는 게 자동차 공학의 일반적인 실험 결과다. 즉, 전조등을 하나만 켠 채 시속 100km로 달리면 운전자는 55m 바깥 장애물을 볼 수 없어 자칫 큰 추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운전자들은 전조등이 하나만 켜 있을 경우 교체 비용도 들고 귀찮기도 하니까 그냥 다니지만 그것이 커다란 위험을 안고 달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운전은 귀중한 내 생명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다.

▲남민배·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